

정신적인 변혁만이 혼란 방지

金 天 賜 〈두산그룹 이사〉



필자

- ▲ 동국대 화학과 졸업
- ▲ (주)럭키 전산부
- ▲ SPERRY UNIVAC(현 UNISYS) SE
- ▲ 두산컴퓨터 소프트웨어 부장
- ▲ 두산그룹 사무개선본부 이사(현)

겨레의 가슴마다 가득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드러내준 서울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올림픽의 서울 유치 결정된 이후 온 국민은 함께 흥분하며, 마음 풀이며, 기대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힘을 모아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한 훌륭한 마무리를 지었다. 올림픽 성공의 요인은 여러 분야에 있겠지만 가장 큰 힘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화사회의 모습, 흔히들 말하는 제3의 물결이 가까운 시일안에 손에 잡힐 듯한 감이 든다. 몇년 전부터

일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PC)의 열풍이 밀려오고, 「DRAM」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극히 생소한 반도체 소자와 기타 첨단 전자기기들의 국내생산 발표가 이를 예고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법률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가기관의 설립 등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도래되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도 혁명적인 변혁이 있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에서는 다투어 미래의 사회상을 조감하여 매우 흥미롭게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들은 흥미와 호기심과 그리고 커다란 두려움으로 그러한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준이라 판단된다. 마치 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면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변혁이 일게 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올림픽 이후의 사회상을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이...

정보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에서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려는 노력으로 과학기술의 개발, 필요 인력의 양성,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정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

때문에 2000년대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는 본격적인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러한 준비는 완벽할 것이며, 필요한 자원개발이나 기술적인 부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큰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정보화사회는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고도 산업사회의 자연스러운 변천이라고 감히 생각해 보지만, 이는 과거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천 과정과는 크게 다른 인간내면의 정신적인 변혁이 따르지 않으면 수많은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로서, 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는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문인력양성 등 정보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추진에 앞서서 범국민적인 정신문화 창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첫째, 올림픽을 전후하여 국민들이 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가를 홍보했듯이 정보화사회가 도래될 때의 국민의식과 행동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전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적 「貧益貧 富益富」 문제보다 정보화사회의 정보에 대한 「貧益貧 富益富」는 보다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보의 내용에 첨단기술의 소개나 사용법 교육 등은 필요없다고 보며, 개념의 정리를 곁들

인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심리학, 윤리학, 철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구성된 대책 수립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산업과 관련되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외국어들을 정리하여 우리말로 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산업이 아무리 외국어로부터 도입한 것이라 해도 남발되는 외국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의 우리나라는 외국문화에 완전히 예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IONS나 WINS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몇분의 몇이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비단 정보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에 만연되고 있는 외국어들을 정비하는 정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외국어 특히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외국어들의 순화기관을 세우고, 국내의 일반 간행물과 국내용 상품에는 외국어 표기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는 첫째, 정보산업 관련 첨단기술이나 미래사회를 흥미나 호기심 충족 정도의 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홍보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국민의식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 또는 정보산업에 관한 취재를 과학부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깊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관한 고 정란이나 시간을 마련하고 매우 상세하고 쉬운 풀이로 기사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기획취재와 같이 상세하게, 투표방법 기사와 같이 쉽게 하여 국민들을 선도

해 나가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한가지 첨단과학 내용에 대하여 몇회씩 연재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째는 역시 외국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술적인 단어라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연구하면 우리말로 순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외국어를 남발하는 경향은 빨리 버려 주기를 요청한다. 국가사회의 장래를 위하여 언론기관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말을 윤택하게 갈고 닦아 우리의 말과 글로써 정보화사회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의 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단견을 버리고,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심협력해야 하겠다. ♣